

힘차게 솟은 임인년...국민주권·지방분권 새 희망 띄우자

2022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다. 올해 임인년(任寅年)은 검은 호랑이띠 해다. 호랑이는 악을 물리치는 힘을 지닌 동물로 강인한 리더십과 함께 도약, 활기를 상징한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올 한해 국가와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은 아직 되찾지 못했지만 희망과 풍요의 열망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코로나19 백신이 크게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덮쳐 지역과 국가 경제가 그로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기회는 있는 법이며, 희망도 새로운 웃음으로 갈아입으며 우리 곁을 떠

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위드코로나에서 다시 거리두기 강화와 모임 제한 조치로 버틸 여력을 소진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절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강구해야 선진사회다운 면모가 드러날 것이다.

국가·지역발전 동량 선출

올 한해는 사회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이면서도 동시에 정치적 위기 또는 기회를 맞게 된다. 오는 3월 9일 대선과 6월 1일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어 유권자들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 무겁다. 기본이

제대로 서는 나라, 원칙과 공정이 원만히 통용되는 나라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중한 주권을 잘 행사해야 한다. 또 지역사회를 이끌고 봉사할 일꾼, 지역 발전을 도모할 동량을 제대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나아가는 만큼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본격 시행된다. 주민주권 구현과 자치권 확대를 비롯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 제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관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물론 지방재정법과 지방조직법, 자치경찰법 등에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 모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독점과 수도권 집중화 폐해를 막고 시대정신인 국토균형발전의 구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광주와 전남도는 역점 사업 및 핵심 현안인 인공지능(AI)산업과 블루이코노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사업은 단지 지역 사회 발전 차원이 아닌 미래 국가 성장 동력이 되는 만큼 정부의 협력과 재정 지원 확보 노력을 기울여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두 광역단체 간 상생발전 기조를

올해에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며 최대 현안인 군 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에 대해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

원칙 흔들리지 않는 사회

지역과 국내 정세뿐 아니라 대외 환경, 특히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한 외교적 압박도 만만찮은 과제다 다가온다. G2인 미·중은 한국을 자 기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혈안이다. 오는 3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 북기조의 재정립과 미·중 사이의 외교적 역량 강화, 한일 관계 복원 등에 대한 방향을 잘 짚아가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국내외 환경이 어렵

다 해도 이대로 주저앉거나 멈출 수는 없다. 분명 이 난관을 딛고 일어설 때는 한층 굳건하고 평화로운 국가가 될 것으로 믿는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 있다. 집단지성을 통해 기본이 바로 서고 원칙과 상식이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열어가야 한다. 또한 풍요로운 광주·전남이 되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전남매일은 올해에도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풍족하게 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희망찬 임인년을 맞았으면 한다. 독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특별기고

국민 주식 '쌀' 식량안보 차원에서 보호돼야



정광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쌀쌀한 날, 따뜻한 밥 한 공기, 뜨끈한 된장국, 그리고 김장 김치...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출고 배고플 때나 몸이 힘든 날에는 뭉글뭉글한 밥이 그리기 마련이다. 아무리 식습관이 바뀌고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면 밥이 간절해진다. 뜨끈한 밥 한 공기는 우리네 속과 마음을 든든히 채워준다. 그리고 뱃속이 따뜻한 밥으로 채워지면 추위도 제법 견딜만하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쌀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삼국시대부터 벼농사가 널리 퍼

졌고 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식문화가 자연스레 형성됐다. 쌀은 다른 곡식에 비해 맛이 부드럽고 담백하며,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 칼륨, 철분, 마그네슘 등 영양소가 풍부하다. 소화 흡수율, 단백질 이용률이 월등히 체내 생리대사에 효과적이며 쌀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 고지혈증을 막는데 도움을 준다. 실제로 쌀을 주식으로 한 문화권은 성인병 발병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쌀은 우리의 삶을 지켜낸 일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런 고마운 쌀이 요즘 찬밥신세다. 올해 388만톤의 쌀이 생산돼 예상 수수량(357~362만톤)보다 27~31만톤의 쌀이 남게 됐다.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 보니 가격하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20kg에 5만1,82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가 낮은 수준이며 계속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남은 전국 최대 쌀 생산지다. 전남도, 전남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이 앞장서 정부 시장격리를 즐기자게 주장했으나 몇

달째 묵묵부답이었다.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생산량이 수수량을 3% 이상 초과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시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음에도 두고 보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또 안타까운 점은 쌀 가격이 높다고 판단, 범부처 물가대응 TF 관리 품목에 쌀을 포함시켜 오히려 쌀값을 낮추는 정책을 펼쳤다.

그럼 정말 쌀값이 높은 것일까? 2020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7.7kg이다. 단순 계산하면 1년 쌀값은 14만9천 원이다. 1달에 1인당 1만2천원 정도 드는 셈이다. 과연 이 가격이 가계에 큰 부담일까? 더 피부에 와닿게 생각해보자. 음식점에 십수년간 유일하게 값이 오르지 않는 메뉴가 있다. 바로 공기밥 1,000원이다. 그런 쌀값을 물가안정 품목에 포함하는 것이 과연 실용성이 있는 것일까?

농업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매년 토지 임대료, 인건비, 비료, 자재, 농기계 유류대 등은 상승한다. 잦은 기상이변으로 병해충과 태풍, 집중호우로 수확량은 매년 불안정하다. 하지만 쌀값은 어떠한

가? 소비자물가지수가 58% 상승하는 동안 쌀 농가 소득은 오히려 4%가 감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즉, 쌀 농가가 그만큼 약화됐다는 반증이다. 옛말에 쌀 한톨을 얻기 위해서 농부 손이 여든여덟 번 가야 하고, 그래서 쌀 미(米)자에 여덟 팔(八)이 2번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농업인 노고가 있어야만 쌀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손해가 계속된다면 과연 쌀농사를 계속하겠는가?

쌀은 단순히 먹을 것 이상이며, 국민 식량안보 즉, 국민 생존권 수호차원에 반드시 보호해야 할 중요 농산물이다. 정부는 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조속히 시장 격리를 실시하는 한편, 적정 쌀값을 유지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쌀쌀한 날, 쌀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후세에도 국민 모두 따뜻히 따뜻한 밥 한 공기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미래까지 우리 국민을 지켜온 소중한 쌀을 지킬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이 찬밥신세가 되지 않도록 말이다.

자치경찰, 생활밀착 경찰로 거듭나야

기지사첩



임채민

기획탐사부 기자

지난해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중앙에 집중됐던 경찰력 상당수가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로 이양됐다. 자치경찰제는 기존 국가경찰이 수행하던 생활안전, 아동, 청소년, 여성보호, 교통지도 등 생활밀착형 범죄예방을 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등도 대상이다. 모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다. 자치경찰 도입에 따라 당장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경찰행정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체계보다 크게 단축된다는 점이다. CCTV, 횡단 보도, 교통신호기 설치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각종 교통체계의 신속한 개선은 단적인 예다.

하지만, 6개월간의 자치경찰제 운영에도 불구하고, 경찰행정의 변화 등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그리 높지 못한 현실이다. 지자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경찰권 일부를 넘겨 받았음에도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와 징계권한을 여전히 국가경찰이 쥐고 있다는 점,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치안서비스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진통 끝에 출범한 자치경찰제가 온전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해야한

다. 지자체가 예산의 상당부분을 감당하며 인사권을 가져와야 실질적인 자치경찰이 이뤄질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자치경찰제는 기존 국가경찰 업무만 쪼개 놓은 정치적 타협안에 불과하다. 인사권 등을 명확히 분리한 후 치안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자치경찰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뿌리 내리기까지 시행착오는 당연하다.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 매뉴얼이나 참고할 만한 정책자료도 마땅찮다. 하지만 이대로 시간만 허비하면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뀔다. 치안행정이 단 한 순간이라도 공백이나 허점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경찰로 서둘러 변화해야 한다. 시행착오와 혼선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

기고

'한국형 스마트항만' 광양항에서 시작된다



김현철

전남도 해운항만과장

세계 컨테이너 항만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컨테이너 자동 하역을 비롯한 선박과 장치가 간의 화물이송을 위한 자율주행기술 등 세계적 수준의 완전자동화 기술이 개발·도입된다.

광양항은 1998년에 동북아 물류거점항만을 목표로 컨테이너부두 1단계 4개 선석이 개장됐다. 이후 3-2단계까지 개발돼 현재 3-2단계는 자동차부두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휴화된 일부 부두는 해양산업클러스터 단지로 개발·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2단계와 3-1단계 8개 선석이 연간 272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하역능력을 갖추고 있다.

광양항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5만톤급 3개 선석과 2만톤급 1개 선석의 완전자동화부두를 개발할 계획이며, 하역능력이 408만TEU로 증대되고 하역작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이 향상되어 광양항 활성화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광양항은 정제된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와 항만 경쟁력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터미널운영사를 통합하여 하역

장비와 부두 재배치를 추진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3-2단계 부두의 자동화·디지털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KMI 보고서(2018년)에 따르면, 컨테이너 터미널의 자동화로 미국의 LBCI는 80% 이상의 환경오염을 줄였으며, 중국의 샤먼항은 운영비 37%, 유지보수비 20%, 연료비 25% 등 절감, 호주와 Patrick 터미널은 안전사고가 90%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스마트항만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혁신을 통해 항만 설비의 자동화·지능화로 물류의 최적화를 통한 항만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선박·육상과의 실시간 정보공유로 하역설비 운용 최적화를 통한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및 친환경 항만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배후도시와의 연계 강화 등 항만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광양항에 스마트항만이 구축되면 규모와 경제 달성을 위한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추세에 따른 대량화물의 신속 처리로 물동량을 늘릴 수 있으며, 하역 생산성 증

대 및 고비용구조 개선, 물류비 절감, 단위당 운영비 절감 등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으로 친환경 항만 구축 및 안전사고 방지, 항만 운영 데이터의 실시간 정보공유 및 관리로 항만 이용자의 욕구 충족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광양항의 스마트항만 운영으로 하역능력과 생산성은 향상되었지만 양적 팽창에 따른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이를 위해 인근 배후산업과 연계한 배후단지를 확충하여 자체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유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산업단지를 비롯한 중설도투기구의 산업단지 개발로 신규 물동량 창출이 기대됨에 따라 3-3단계 부두의 스마트항만 구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국내 항만 간의 경쟁이 아닌 세계 주요 컨테이너항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광양항이 배후산업과 연계한 배후부지 확충부터 산업 활성화, 물동량 창출, 항만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독자광장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 멈추세요

교통사고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작별인사조차 허락하지 않는 큰 비극이다. 소중한 내 가족이 위험하다면 우리는 가만히 낫 놓고 바라볼 수 있을까.

최근 우리나라의 교통 사망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보행자 사고(우리나라 10명 중 4명)는 아직도 OECD 회원국 평균치(10명 중 2명)의 2배에 가까워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대목이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규정이자 약속이다.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횡단보도에 서면 차량들은 보행자를 본 듯 안 보인 채 제 갈 길을 가기 바쁘다.

운전자도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 반드시 일시 정지한다.

둘, 보행자가 있는지 좌우를 잘 살핀다.

셋, 서행해 우회전해야 한다.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는 몇 초를 남겨 두고 뛰어들어 보행자가 있을 수 있어 횡단보도 신호가 끝나갈 무렵에는 더욱 신중히 살펴봐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아울러, 화물차 등 대형차량 운전자는 운전석에 앉아서 보행자를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차로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보행자 또한 안전한 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 신호등이 몇 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황급히 뛰거나, 핸드폰을 보며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주위를 경계하지 않고 걷다 보면 사고를 당할 수 있기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한다. 보행자가 보일 때 멈추면 늦는다. 멈춰야 비로소 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교통문화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보행자 안전을 우선 지키는 보행자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김대원 광주경찰청 교통과 교통안전계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신고 182	▲인공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수도 고장신고 121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전기고장 신고 123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응급의료센터 1339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聲秀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 치 부 (062) 720-1060-62	편집 부 (062) 720-1073	기사제보			
경 제 부 (062) 720-1066-67	논 설 실 (062) 720-1006	•TEL (062) 720-1050-53			
사회체육부 (062) 720-1050-53	전 산 실 (062) 720-1033	•시해부 010-5601-2219			
사 회 2 부 (062) 720-1043	월 간 국 (062) 720-1007	•FAX (062) 720-1080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판 매 국 (062) 720-1004	•E-mail jndn@chol.com			
문 화 부 (062) 720-1071	사 업 국 (062) 720-1011,1099	광고문의			
사 진 부 (062) 720-1040	광 고 국 (062) 720-1016-17	•TEL (062) 720-1016-17			
기획탐사부 (062) 720-1045-46	관 리 국 (062) 720-1012	•FAX (062) 720-1020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